

국정현안 시·도지사 초청 토론회 모두말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모두에게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독립·분리된 것이 아니고 국정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을 맞추어 첫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앙정부가 발제를 준비한 것이 균형발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방과후 학교,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등입니다. 중앙정부가 준비했지만 사실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발제할 주제들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 다만 균형발전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다소의 대립 또는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고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선진국이라고 하면 OECD 국가들을 말하기도 하고, 좀더 좁히면 G7 국가 또는 G10 국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G10 하면 한국도 이제 턱걸이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균형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고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비교적 넓은 공간을 여유 있게 쓰면서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일극집중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에 장애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두바이에 갔을 때 그곳 상공회의소장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기업과 그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로 몰려들니까?” 했더니 딱 한 마디로 “살기가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사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앞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이 바로 경쟁력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지적 영역에서 생산성이 매우 높은 것을 말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지적 수준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 인재들이 모여야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특히 수도권의 살기 좋은 환경 경쟁력이 얼마나 높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생활환경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과밀화된다면

또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도권 경쟁력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상생해 보자고 하는 정책으로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론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수도권 단체장 여러분께서도 크게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도 모두 다 살기 좋은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가야 생기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재입니다. 인재를 만들어내는 지방 대학, 그 다음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급 인재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교입니다. 지방에서 이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지방은 아이들 교육환경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서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만, 절실히 필요한 곳은 역시 지방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어서 이것을 꼭 좀 성공시키면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입시과외 같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 학교에서 하든 학원에 가서 하든 어디에서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입시가 과열 경쟁이 되지 않도록 입시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될 새로운 입시제도도 종합적으로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분야별 줄 세우기'를 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입시 경쟁에 있어서도 분야별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과열된 입시 경쟁을 막아 보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

이 우선이지 방과후학교에서 입시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중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는 특기 적성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에 오면 입시 중심이 되지만 그것 또한 전국에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뜻에서 장려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공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을 살려 나가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면 저도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민생 문제가 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한 쪽이 영세 자영업입니다. 영세 자영업 비율도 한국이 세계 최고이고 비정규직 비율도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안에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있고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가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면피성 발언을 한다면 이 문제는 1998년부터 물려받은 것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고용의 유연성 문제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28%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7%, 일본은 얼마 전까지 15%라는 통계를 봤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1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의 4배, 일본의 3배 가까운 영세 자영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율에 있어서 이미 살리는 것이 한국의 시장구조, 경제구조로서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기울여서 고용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로 확대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 대학교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 양성은 미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발전전략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당장 고용지원 서비스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부는 지역에 밀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지역의 여러 기관, 시민사회, 지방 학계, 교육기관 모두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과 자율은 한편에 있어서는 좋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손발이 잘 안 맞는 약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풀어야 합니다. 일자리 없는 것을 전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 나갈 방도를 오늘 노동부 장관이 말씀하실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손발을 맞추어서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민생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애로라든지 정책 건의는 전부 수렴해서 다음 회의 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